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이 봉 훈

농림부 서기관

I. 농촌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1. 주변 여건의 변화

최근 들어 농촌은 외부적으로는 수입개방의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적으로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공동화, 고령화현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직불제, 토지구제완화, 도농교류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의 지속적인 농촌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아직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과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시설이 도시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고, 그동안 계속되어온 이농(離農)현상으로 빈집과 폐교가 곳곳에 산재하는 등 또 다른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도시가구대비 농가소득이 90년 97.4%에서 2003년에는 73%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향상, 주5일근무제 실시, 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국민여가 패턴이 변화하고 농촌의 다원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관광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관광의 연간 수요량이 2001년에는 3천만명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1억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관광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9.4%에서 2011년에는 24.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연구결과는 도시민의 64.6%가 농촌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살펴보면 우리 농촌관광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찾아볼 수 없는 자연경관, 역사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에 투자하고 자주 찾아오게 함으로서 도시민에게 농촌전원생활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농촌지역 활성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농지전용이 쉬운 한계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농지전용을 통해 펜션·전원주택을 건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여가를 농촌에서 가족단위로 영농체험을 하면서 보내는 건전한 관광형태가 앞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호기로 이용하여 농촌지역개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등 새로운 농촌정책을 활발히 전개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정책상황의 변화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05)되므로써 지역개발관련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에 포함하여 지원될 계획이다. 따라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지방양여금에 의한 예산체계와는 다르게 운영될 것이다. '06부터 지역개발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지원', '기타사업'의 3개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용될 계획이며, 지역단위의 종합개발방식 사업은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기초자치단체별(시·군·구)로 사업별 예산한도가 별도로 정해질 것이다.

나.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필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중이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세가 지속되므로써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확충하고 농림부는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체제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을위한특별법」은 농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경관의 보전 및 형성,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책의 추진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II.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방향

1. 그간의 농촌지역개발사업

'90부터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택지조성, 도로 등 마을기반정비, 복지회관, 주차장 등 공동편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정비사업이 우선시 되어왔다. 그동안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주택개량 등을 통해 농촌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은 아직도 중소도시에 비해 낙후된 실정이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면별로 균등배분하는 지방양여금의 성격상 면 전체에 분산 투자되어 총체적인 정주여건의 개선효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면 개발계획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 개발계획(230억원)상 도로정비에 43%(100억원)를 계획하였으나, 1단계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70%(21억원)가 도로정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이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되어 양여금법에 의해 지역(면)별로 균등 배분해 오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종래의 하향식·획일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업메뉴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개발 모델은 농촌의 쾌적성(Amenity)과 농촌다움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농촌을 농업인은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2. 앞으로 농촌지역개발 방향

가. 살기 편한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정비

농촌을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이 생활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전통·문화·휴양·생태공간으로서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어울려 상생(相生)하며 혼주(混住)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경제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인프라위주의 개발에서 경관개선 등 병행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인프라시설 위주의 사업에서 다양한 경관개선 지원사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1단계사업의 마무리(770개면)를 위해 '04까지는 종전방식대로 실시하고 '05년 이후는 농촌경관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도시민의 농촌정주 유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와 농원 등을 조성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주요 목표로 한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마을을 묶어 권역단위로 종합 정비

권역단위의 종합정비라 함은 동질성을 가지고, 연계개발이 가능한 마을들을 소권역 단위로 묶어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적 권역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거점도시와 연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1,000개 소권역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마. 면 중심지의 집중개발

생활중심지인 면소재지를 집중 지원하여 교육·의료·행정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중심지역활을 회복하도록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의 새로운 추진이 요구된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시가지정비·녹지조성·주차장·조경시설 등의 기반정비와 마을단위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문화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집중배치 함으로써 중심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테마형 개발의 추진

농촌의 생태환경·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주제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될수 있는 ‘농업테마공원조성’ 및 ‘수변공간조성사업’이 추진이 필요하다. 화훼·약초·난·공충 등을 소재로 자연생태공원·건강생약초단지·허브농장 등 다양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주변, 마을을 흐르는 소하천 등의 수변을 환경친화적 재료를 이용, 정비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III. 농촌지역개발의 사업별 내용

1. 면 정주기반확충사업

가. 기본방향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 구역을 말함)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지역중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의 지원과 농촌경관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주여건을 확충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종래의 인프라 위주의 사업에서 농촌다움을 증진할 수 있는 경관조성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균등배분 방식의 지나친 분산투자는 지양하고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에 중점 투자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나. 세부추진사항

마을기반정비, 도로, 문화복지시설, 농촌산업기반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주택정비 및 녹지공간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기반시설정비는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마을회관, 농로포장 등이 해당되며 주택정비, 녹지공간 및 소공원 설치, 마을조형물 및 가로조성 등 농촌경관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원규모는 면당 30억원내에서 3년간 보조로 지원되며, 주택신축 및 개량에 필요한 자료는 용자 지원이 가능하다.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가. 기본방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특성화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3~4개 마을을 하나의 소권역을 설정하여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지 선정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시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수립내용에 대해서 기본구상, 기본계획, 투자계획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 세부추진내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시설물 위주의 기존의 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갖추고 있어 단순한 시설지원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분야까지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사업추진방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입 시설물의 경우 지역경관, 전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환경친화적 시설물들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지원규모는 권역당 70억원 수준으로 국고80%, 지방비 20%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3. 전원마을 조성사업

가. 기본방향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성화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취미영농과 전원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농촌지역에 건전한 여가·휴양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도시은퇴자와 은퇴농업인 등이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분양 및 운영 등은 사업시행자(민간)가 담당하고 국가·지자체는 단지까지 이르는 진입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모에 따라 10~20억원 지원, 국고 80%, 지방비 20%)

나. 세부 추진내용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다음의 3가지의 모델로 살펴볼 수 있다.

< 모델1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 농촌이 가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15~50호 규모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지자체, 일반인(직장인·친지·동호인모임 등),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규모의 단지를 조성·분양

① 민간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직장인·친지·동호인모임 등 다양한 민간인 그룹이 사전에 입주자 및 개발대상 토지를 확보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주거단지를 조성하며 단지조성 및 주택건립은 입주자(시행자)부담으로 추진하고, 단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전기인입 등 기반시설은 규모에 따라 차등 보조지원하는 형태이다.

② 시군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시·군이 주체가 되어 대상토지를 확보(용지매수)하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보조지원 방식은 민간주도형과 동일하다.

< 모델2 : 체재형 주말농원 >

- 주말을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소규모 농장과 20호 규모의 체재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조성

① 취미형 주말농원

일반인(투자자)이 체재형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하여 1년단위 또는 당일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형태이다.

②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공기가 맑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휴양목적의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조성, 장·단기로 임대하는 형태이다.

③ 사원복지형 주말농원 .

기업이 사원복지를 위해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조성하여 사원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 모델3 : 은퇴농장 >

○ 노령자,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영농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는 농장 및 주거시설을 조성

①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도시은퇴자 및 은퇴농업인 등이 주택을 임대, 함께 거주·생활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20~29호 규모의 주거단지 및 농장을 조성하는 형태이다.

② 고령친화농업형 은퇴농장

중산층 도시은퇴자 및 은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녹지공간 등 쾌적한 편의시설을 갖춘 중규모단지를 조성,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30~49호 규모의 주거단지 형태이다.

③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중산층 도시은퇴자 및 노령자, 은퇴농업인 등이 안심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편의·의료서비스, 복지시설 등을 갖춘 50호 이상의 복지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형태이다.(예: Senior Complex)

4.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가. 기본방향

면소재지의 소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복지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면소재지의 중심지 역할 회복을 통한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권역단위 교육·의료·행정망을 형성토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집중 육성하여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기반과 면소재지 권역을 연계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산업, 소규모 입지 자유형 산업, 여가문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 세부 추진내용

농어촌지역의 주요 거점 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설치가 어려운 주민공동이용시설 위주의 정비·확충이 선행되어야 된다. 즉, 시가지정비, 도로확포장, 승강장, 공동주차장, 조경시설, 조형물설치 등의 면소재지 기반정비와 마을단위에서 설치가 어려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면소재지에 집중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시가지 정비, 승강장, 공동주차장, 조경시설 조형물 설치, 간판정비 등 소재지 기반정비와 교육·문화·복지회관, 주민쉼터, 체육공원, 건강관리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그리고 농촌관광기반시설, 지역특산물 유통시설 등 소득기반시설의 확충, 향토문화발굴·보전 및 축제개최 등 문화·관광사업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면소재지당 30억원 범위내에서 보조(3개년)와 주택신축·개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용자의 지원이 가능하다.

5. 수변공간 조성사업

가. 기본방향

주변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변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인근마을의 농촌관광계획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산간 계곡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도도가 개설되어 있어 휴양자원으로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국에 3천여개소로서 그중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1차 개발 대상 저수지는 80여개소이다. 저수지 주변에 순환도로·산책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수변공간 조성은 지자체 아울러, 농업기반공사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을의 소하천이나 농업용수로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세부 추진내용

저수지 주변도로, 휴식시설 등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상레저·수상골프연습장·뉘시터 등의 사업은 임대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저수지 주변에 전원주택 등을 설치토록 하여 마을민박시설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수변공간조성사업을 마을종합개발사업 메뉴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고,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지구는 개발사업계획에 수변공간조성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기설저수지의 개발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규모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구당 6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6.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가. 기본방향

농업을 주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테마공원을 조성,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활력 증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해주며, 공원조성은 민자유치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투자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투자자는 입장료 등의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세부 추진내용

화훼, 약초, 난, 곤충 등의 다양한 농업관련 소재와 어우러진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 휴식처로 제공하고 공원내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과 지역특산물을 방문객에게 직판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위해 농업테마공원 관리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테마공원의 운영은 민간에 맡겨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구당 30억원 범위내 (국고 50%, 지방비 50%)의 지원규모로 주택신축·개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용자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농교류와 농의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생태공원”, “건강생약초단지”, “생태농업테마파크”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대부분 지자체 사업으로서 규모가 커서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앞으로는 민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V. 향후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각종 농촌지역개발관련 사업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가지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종래의 하향식·획일적인 농촌지역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여건변화와 농촌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에서 직접 살며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 및 지자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문가들이 좋은 계획수립을 하여 각종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는 또 하나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발의 직접 수혜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유지를 담당할 주민과 지자체의 체계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리더육성 등 다양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가동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외부자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처럼 농촌에 대한 투자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지속적이며 경쟁력있는 지역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유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과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동 개발방식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토지를 제공하고 외부자본은 시설투자를 하는 공동투자방식을 도입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생활기초시설, 공공시설 등의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자본은 농업테마공원 등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농촌공간은 1·2·3차 산업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농산업 복합공간(Agri-business tow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단위의 종합적 계획 틀 안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지역개발은 대상범위의 크기에 불구하고 각종 관련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각 부처별 관련사업을 상호 연계·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계획실행 단계에서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과정 등이 소관 부처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등 계획실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기능을 갖춘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부부처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균특

회계 출범 등과 연계하여 지역을 고려한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 체계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가(기관)간에 지역개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개발은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새로운 개발과제를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주민, 지자체 공무원, 지역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기관)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상호 정보교환, 자문, 컨설팅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